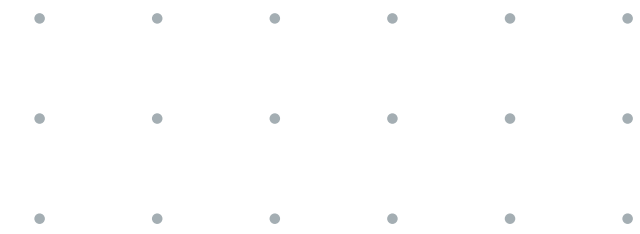


Defense Reform 2020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목차 Contents

- 하나 | 21세기 선진한국을 지켜낼 강군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3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절실한 과업입니다.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을 지향합니다. 국방개혁, 이렇게 추진합니다.
- 둘 | 2020년 우리 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1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합니다.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운영 체제로 혁신합니다. 꿈과 보람이 있는 새로운 병영 문화를 가꿉니다.
- 셋 | 국방개혁,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 37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소요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며,
보다 정밀한
첨단 정보과학군



하나

21세기 선진한국을 지켜낼

**강군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 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방위의 보루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50여 년 이상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온 우리의 국방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절실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절실한 과업입니다”



1 정보·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전쟁양상이 급속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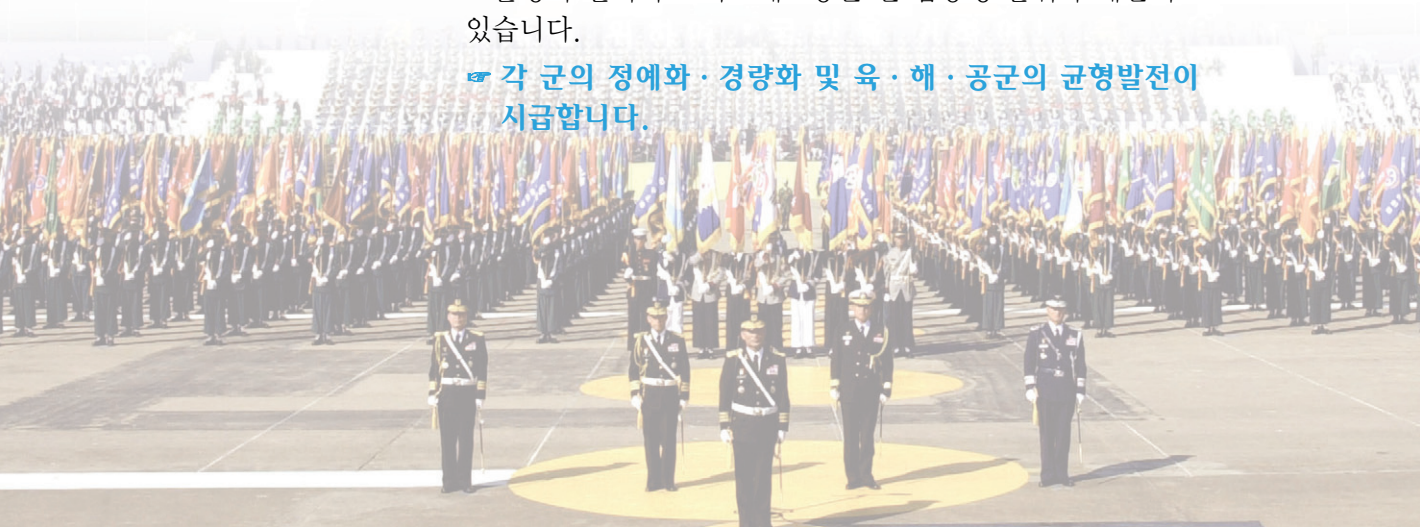
최근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보았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거리, 정밀성 및 파괴력이 증대된 무기체계가 출현하고 실시간 정보·지휘통제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전장공간 확대, 장거리 정밀타격전, 네트워크 중심전(NCW) 등 새로운 전쟁양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각국은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2 우리 군은 아직, 병력위주의 大軍체제 유지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한 지상군 위주의 양적 구조를 유지하여 작전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육·해·공군 간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각 군의 정예화·경량화 및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 시급합니다.



3 한미 연합방위태세 속에서 우리 군의 작전기획·수행능력 발전 소홀

한미 연합방위태세 속에서 한국 고유의 전략 및 군사교리 발전과 작전수행능력이 미흡한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한국 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의 작전 기획 및 수행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 국방운영 전반에 비효율성 잔존

국민편익, 장병복지 수요가 증대하여 전력투자 여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경영혁신이 미진하여 여러 곳에 낭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 자원절약형 국방운영 혁신이 절실합니다.



5 전근대적 병영문화의 지속, 대군 신뢰 저하

또한 권위주의적 리더십, 경직된 군대조직 문화가 잔존하여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심리마저 유발되고 있습니다.

☞ 선진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선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을 지향합니다”

1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기동하며, 보다 정밀하게 타격하는 군대를 육성하겠습니다.

2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군

효율적인 국방력 건설 및 운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의 자원절약형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3 선진 한국의 위상에 부합되는 선진 국방

문민 중심의 국방정책 결정 및 집행을 보장하고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4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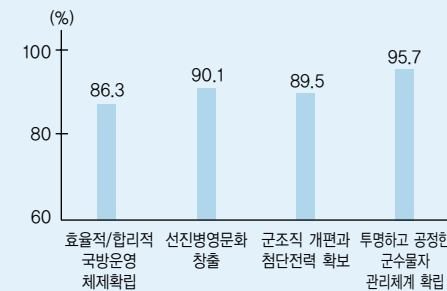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신뢰 속에 임무에 전념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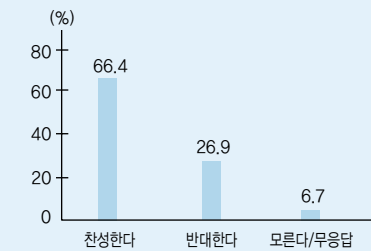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은?

'05년 8월 24일부터 25일에 걸쳐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야별 국방개혁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국방개혁 법제화 찬반 여부



(설문기관 : 미디어리서치, 표본오차 ±3.1%)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국방운영체제의 비효율성을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개혁합니다.



“국방개혁, 이렇게 추진합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수차례 국방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각 군간 이해상충, 추진 의지와 제도적 기반 미흡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그 성과가 미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경험과 자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비전과 목표 하에 명확한 추진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1 2020년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 안보환경과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15년간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합니다.
- 3년마다 안보환경 및 추진 여건을 평가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검토, 보완합니다.

2 법제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 개혁안을 공개하고 군 내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룹니다.
- 주요내용을 법으로 정하여 추진합니다.
- 국민·국회·정부·군의 노력을 결집하여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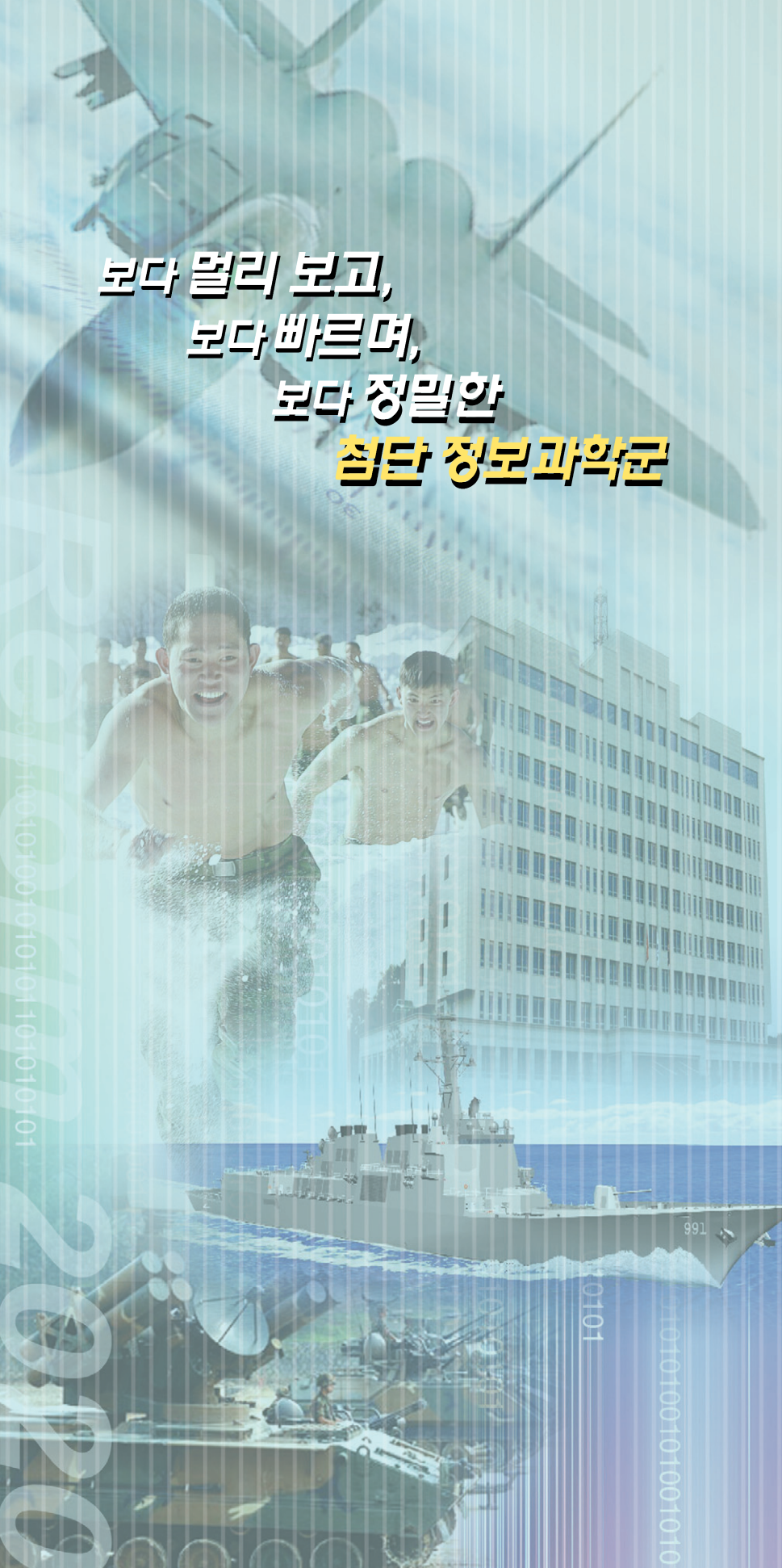
3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추진합니다.

-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추진합니다.
- 병력 규모는 첨단전력 확보 및 군 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조정합니다.
- 군 지휘부가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개혁을 주도합니다.

4 국내외의 신뢰와 지원 속에서 추진합니다.

-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개혁 추진을 관리합니다.
- 국제사회도 우리의 개혁을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 국방부 문민화 등 개혁여건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부터 차근차근 추진합니다.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보다 정밀한
첨단 정보과학군



나침

2020년 우리 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 리 정부와 군은 국방개혁을 국가차원의 역사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전략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2년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군은 앞으로도 국방개혁이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이러한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의 모습을 제안하고 약속합니다.

“병력 위주의 양적 군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합니다”

우리 군은 제한된 국방재원 하에서 첨단전력보다는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그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전투력이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현대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전장운용개념에 부합되도록 전력은 첨단화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예화된 군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1 병력구조

• 첨단 전력 확보와 연계하여 상비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현재 68만여명 병력은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정예화하며 상비병력은 전투임무 수행에 매진하게 됩니다.

총병력 및 각군 병력



2 전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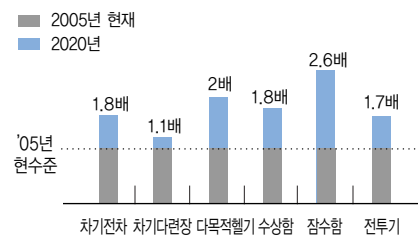
• 정보·감시 및 지휘통제 능력 강화

조기경보기, 무인항공정찰기(UAV), 정찰위성 등 조기경보 및 표적획득 능력을 강화하여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가 가능한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합니다.

• 기동·정밀타격능력 향상

차기전차, 다련장로켓, 다목적헬기, 각종 신예 전투기 등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와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기동성과 정밀타격 능력이 현저히 증대됩니다.

2020년 능력 변화



3 지휘·부대구조

•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작전수행체제를 구축

전·평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보, 작전기획 및 수행, 합동전장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 각 군 본부는 고유 기능에 충실한 조직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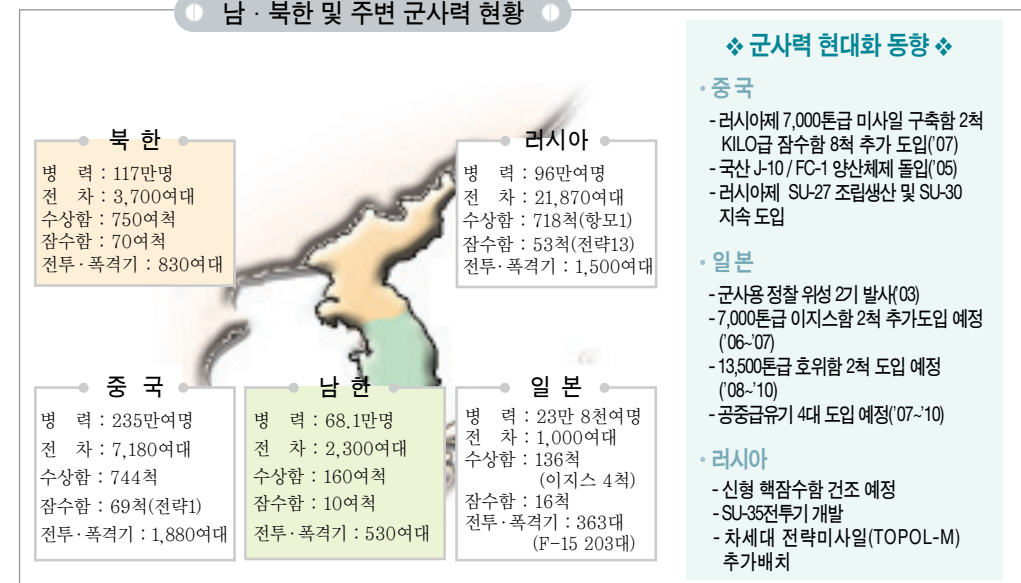
전투지원 및 동원 등 군정과 관련된 임무수행 능력을 보장합니다.

• 부대수의 축소 및 중간지휘계선 단축

부대숫자를 축소 조정하고 중간지휘계선을 폐지하여 지휘계선을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한반도 전쟁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남·북한 및 주변 군사력 현황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05 일본방위백서)

Q&A

Q 병력규모를 30만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A 50만명의 병력 규모는 2020년 안보상황과 전략환경 하에서 한반도 전쟁 억제력 및 방위충분성 전력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부대구조와 수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일부에서 30-35만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통일 이후에나 생각할수있는 수준으로 현재의 한반도 주변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이 117만명의 대군을 유지하는 한 이의 1/4에 불과한 병력으로는 전쟁 억제력 확보가 곤란합니다.

◆ 군사력 현대화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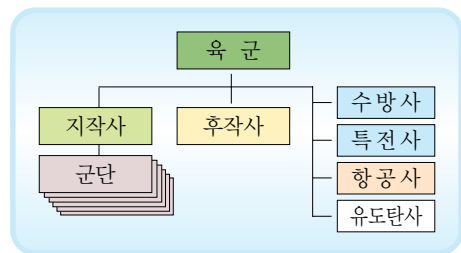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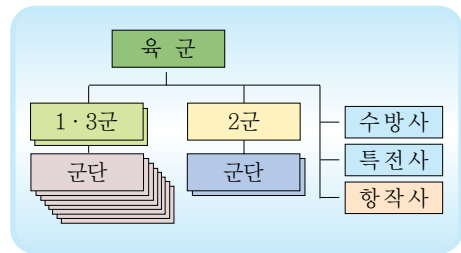
- 중국
 - 러시아제 7,000톤급 미사일 구축함 2척 KIL0급 잠수함 8척 추가 도입('07)
 - 국산 J-10 / FC-1 양산체제 도입('05)
 - 러시아제 SU-27 조립생산 및 SU-30 지속 도입
- 일본
 - 군사용 정찰 위성 2기 발사('03)
 - 7,000톤급 이지스함 2척 추가도입 예정('06-'07)
 - 13,500톤급 호위함 2척 도입 예정('08-'10)
 - 공중급유기 4대 도입 예정('07-'10)
- 러시아
 - 신형 핵잠수함 건조 예정
 - SU-35전투기 개발
 - 차세대 전략미사일(TOPOL-M) 추가배치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보다 정밀한 첨단 정보과학군

“육군의 병력과 부대수는 줄지만 전투력은 강화됩니다”

육군은 대규모 병력과 구형 무기 위주의 방만한 전력구조를 유지하여 운용유지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기술(IT)과 지휘통제체계(C4)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의 다단계 지휘구조를 보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대수 및 병력은 대폭 감축

병력은 17만 7,0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기동력, 타격력, 생존성, 정밀도는 향상시켜 보다 유연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게 됩니다.

현 10개 군단 중 4개를 감소하여 6개 군단으로, 47개 사단은 20여개로 대폭 정비합니다.

2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하여 작전사령부로 개편

1·3군사령부를 해체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하며 예하의 군단사령부를 해체하여 지휘단계를 단축합니다.

또한 향토사단은 도 단위 1개 사단 기준으로 유지하되 해안경계임무는 타 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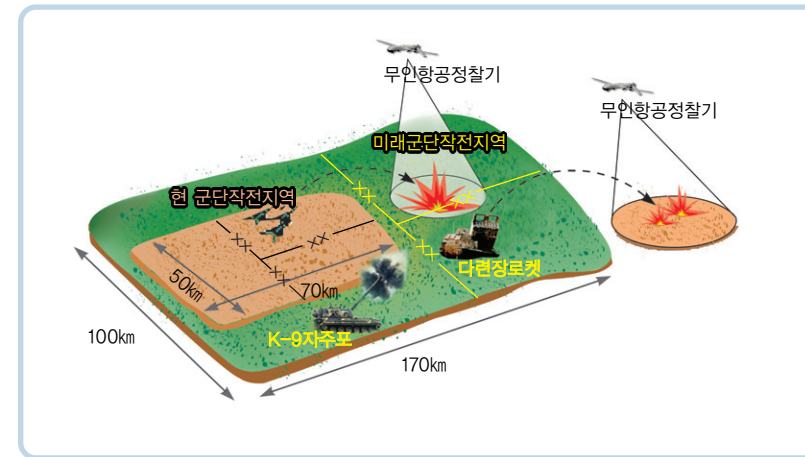
Q&A

Q 병력감축에 따른 조기 전역자에 대한 대책은?

A 일부에서는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정예화함에 따라 간부들의 대규모 감축이 있을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부가 많은 선진국형 인력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에 부사관은 약 3만명이 늘고 장교는 약 1,500명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15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초임 장교의 총원 조정 및 정년 전역 관리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해소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기 전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3 기동부대의 전투력 강화

육군의 군단과 사단수는 줄지만 각각의 부대는 정보감시능력 기동력·화력의 보강으로 작전지역은 오히려 2~3배 확장됩니다.



현재	2020년
감시능력 : 저고도 무인항공정찰기	중고도 무인항공정찰기
타격능력 : 155밀리(주장비), 현무 등	K-9자주포, 다련장 로켓 (MLRS, 정밀타격유도탄 등)
기동능력 : K-1전차, K-200장갑차	차기전차, 차기장갑차
UH-1H, 500MD	한국형 기동 및 공격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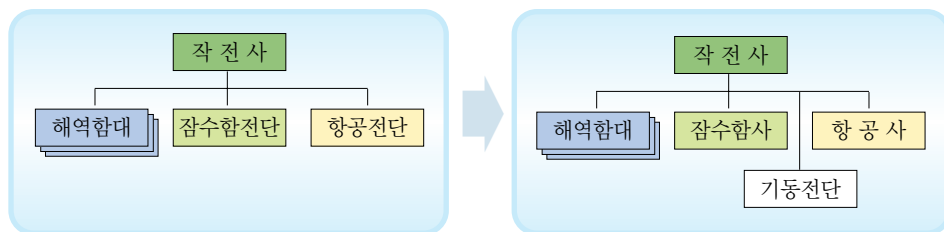
병력과 구형 무기 위주의 방만한 부대구조를 첨단화·정예화하여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태세를 갖추습니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합니다”

우리 해군은 현재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3면이 바다인 한반도 전략환경 하에서 국가 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동시에 해상 교통로 및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 이익을 적극 수호할 수 있는 전력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1 부대구조 보강

현 3개 함대사와 잠수함 및 항공전단 체제에서 3개 함대사, 잠수함사, 항공사 및 기동전단 체제로 보강, 개편합니다.



2 전투능력 대폭 증강

수상함 전력은 북한 및 역내 위협에 대해 적절히 대응 가능토록 함정의 척수는 줄이되 중·대형함(차기호위함, 이지스함 등)으로 보강하여 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킵니다.
또한 잠수함과 항공전력은 미래전장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보강하면서 잠수함 전단과 항공 전단을 각각 사령부로 개편합니다.

3 해병대는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 구비

무인정찰기, 상륙용 다련장포 등 감시·타격능력과 차기 상륙용 장갑차 및 상륙헬기를 증강함으로써 현재 대대급 상륙작전 능력을 여단급으로 확대합니다.



Aegis

이지스함이란?

이지스의 어원은 희랍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방패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이름처럼 이지스함은 현대 해군 수상함 중에서 가장 방어력이 우수한 함정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백 개의 적 항공기, 함정 등을 동시에 탐지·추적하여 이를 원거리에서 타격함으로써 우군 전력이 안전하게 보호된 가운데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해·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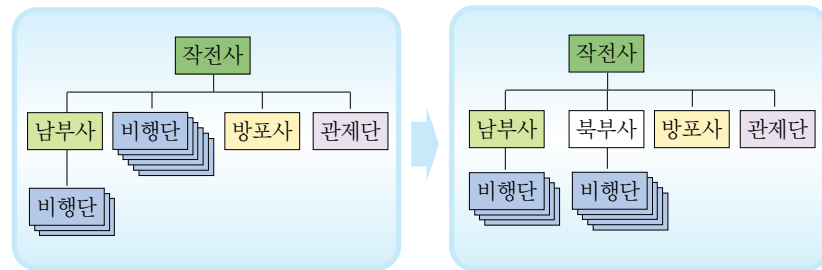
현재 한반도 주변에 대한 제한된 작전능력은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하고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공군은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합니다”

공군은 현대전의 중추전력으로서 평시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응징보복능력을 구비하며, 전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지상 및 해상작전 수행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군은 가용 국방재원, 협소한 한반도의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최첨단 고성능 전투기와 중·저급 전투기를 혼합한 최적의 전력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휘·통제체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1 남부·북부 전투사 체제로 개편, 비행전대 해체

북부전투사를 창설하여 2개 전투사, 방공포병사령부, 관제단 체제로 개편하고 비행단과 비행대대의 중간제대인 비행전대를 해체하여 지휘계선을 단축합니다.



Q&A

Q 작전사와 전투사(남부·북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작전사는 중앙집권적 지휘 및 통제를 통해 전력 배분 그리고 평시 대비태세 유지 및 전쟁징후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전투사는 지역별 공중작전 전담 및 기타 부여된 항공작전을 시행하고 평시 조종사 정예화 및 전투준비태세를 유지·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보다 정밀한 첨단 정보과학군

2 High-Low Mix 개념의 전투기 운용

현재 중·저성능 항공기 위주로 구성된 500여대의 전투기는 2020년까지 고성능 항공기와 저성능 항공기를 최적으로 혼합하여 420여대 규모로 정예화합니다.

수명이 30년 이상된 F-4/F-5 기종 300여대는 도태되고, 2008년까지 전진방공과 장거리 교전이 가능한 F-15를 도입하고 최첨단 신형전투기(F-X)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갑니다.

현재



2020



우리 공군은 전력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현재의 제한된 작전영역을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필수전력을 확보합니다.

“예비군을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정예화하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제공합니다”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보다 정밀한 첨단 정보과학군

현재 운용 중인 300여만명의 예비군은 자원관리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소요되고 필요한 물자·장비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제한됩니다. 예비군을 명실상부한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육성하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꼭 필요한 실소요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예비군 관리 및 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1 예비군은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

300여만명의 예비군을 실소요 1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유사시 상비군과 함께 완벽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예화하고 예비군 훈련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예비군 관리제도 개선

구분	평시	전시
동원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청 : 자원관리 • 군 :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사단은 적정 규모로 조정 • 연대/대대단위로 정밀편성하여 부대 단위 보충
향토방위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방위부대 : 자원관리 • 필요시 시·군·구에 관리전환 	향방작전 운용 : 향토사단

3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통합예비군훈련장(훈련센터)을 설치하여 Cyber 교육과 입소훈련을 병행하고 입소훈련은 마일즈·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하여 흥미와 성과 위주로 실시합니다. 또한 훈련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보상비를 증액하여 적정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비군 자원의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과 노력을 절감하면서도, 유사시 즉각적인 전력 발휘가 가능한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보유합니다.

Q&A

Q 예비군 규모는 적절한가?

A 2005년 현재 300여만명인 예비군을 2020년까지 총 150만명 규모로 감축할 예정이며, 이는 조정된 50만 상비군의 부대수와 편성을 고려한 증·창설 소요 및 손실보충소요 그리고 향방작전 소요 등을 감안한 적절한 규모입니다.

앞으로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부족한 향방물자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예비군 간부의 상근복무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평시 군에서는 1-5년차 자원에 대해 현역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6-8년차 예비군 자원은 유사시 작전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비군 제도를 검토·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국방운영의 문민 기반을 확대하여 선진 민주국가의 문민통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합니다”



국가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 고유의 영역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체제에 입각한 민·군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우 문민통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운영을 위한 문민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문민중심의 국방정책 결정 및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정책과 군사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각 군간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은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1 국방부의 공무원 직위 확대

2009년까지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현재 52%에서 71%로 조정해 나가며,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방대학교에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국내 장기교육훈련 인원을 확대해 나갑니다.

2 국방 민간인력 확대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무원을 현재 현역 대비 3.9%에서 6%까지 확대해 나가며, 교육·연구·행정·기술 분야 직위를 확대토록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선진국형 군무원제도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3 국방 주요 직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 인사를 국방 주요 직위자로 임명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장교단의 올바른 리더십을 배양해 나갑니다. 합참의장은 '07년부터 적용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토록 합니다.

인사청문회 규정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행정부 고위직 510여명, 사법부 대법관 등 판사 60여명 및 군인 소장급 이상 430여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군인의 경우 통상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통합군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24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미국연방헌법 제2조, 상원 의사규칙 제26조, 상원 의사규칙 제31조, 각 상임위원회 의사규칙)

“국방획득의 투명성 · 효율성 ·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국방획득제도는 수차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획득조직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고 사업추진 절차가 복잡하여 의사결정시스템 전반의 투명성 · 효율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획득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미진하여 국방획득 전반의 혁신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4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기존의 방위산업 전문화 · 계열화 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수출지원업무를 강화합니다.

방위사업청 신설의 기대효과

• **최적의 무기체계를 획득하게 됩니다.**

“적기에(Faster)
질 좋은 제품들(Better)
경제적(Cheaper)으로” 획득합니다.



•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방위사업 관련 반복되는 비리를 완전히 근절합니다.



• **고객지향의 방위사업행정을 구현합니다.**

국민에게는 예산절감을,
기업에는 최선의 행정서비스(기술정보 제공,
수출 지원 등)를,
소요군에는 질 좋은 장비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 **방위산업 경쟁력을 증대합니다.**

국가과학기술과 연계된 국방 R/D 개발력과
방산수출력을 강화합니다.



Q&A

Q 방위사업청 신설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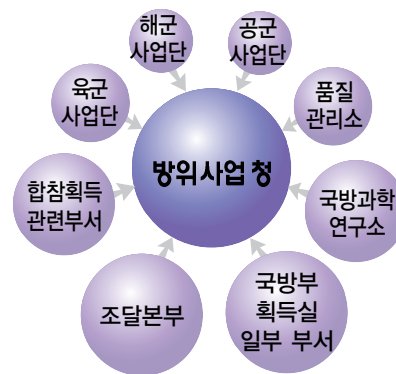
A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므로 그 활동에 대해 장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상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부 부서간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직하고 주요 의사 결정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청렴서약제, 정책실명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획득업무가 가능합니다.

1 방위사업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국방획득관리규정」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간으로 하는 「방위사업법」을 제정하고 정책실명제, 청렴서약제, 청렴옴부즈맨제도 등을 운영하며 투자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상시 감시 및 견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 방위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

합동군사전략 차원의 소요제기에 의해 각 군 전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고려한 획득계획을 수립하고, 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관리기관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3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방획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근무 보직자격제 시행, 전문인력 직위 신설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국방관리체제를 혁신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현저히 높입니다”

첨단 정보과학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성능 · 고지식의 국방인력을 확보하고 선진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기 · 장비가 복잡화 · 고가화 ·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합리적인 군수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국방자원관리 전반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1 선진국방에 부합되는 인력 운영

전투효율성을 높이고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인력구조 및 운영체제를 개선합니다.

현재의 병 위주 병력구성은 간부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선진국형 인력 구조로 전환합니다.

* 간부 : 병 비율, 현재 25:75 → 2020년 40:60

여군 장교와 부사관은 각각 7%, 5%까지 확대됩니다.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병 모집분야를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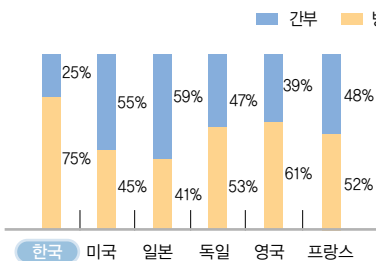
Q&A

Q 유급지원병제는 무엇이며, 모병제 실시는 가능한가?

A 유급지원병제는 전차 · 헬기 등의 운용과 정밀 장비 등의 정비 · 수리 분야의 기술 · 숙련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정 분야에서 의무 복무를 마친 병사들이 지원할 경우 일정 급여를 조건으로 추가 복무토록 하는 것으로 실시 조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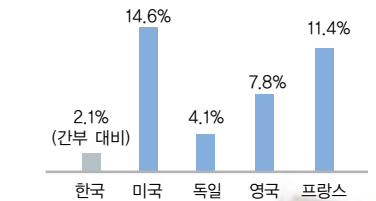
모병제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우리 국가의 경제력이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시행할 수 있으며, 2020년 이후에 검토 ·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요 국가 간부 : 병 비율



(출처 : KIDA, 「세계국방인력편람 2003-2004」)
* 한국 : '05년 현재 기준

주요 선진국 여군 비율



(출처 : KIDA, 「세계국방인력편람 2003-2004」)
* 한국 : '05년 현재 기준



2 전투근무지원분야의 과감한 아웃소싱

양질의 전투근무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현역요원이 전투 · 작전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아웃소싱을 과감히 확대합니다.

각군의 보급 · 정비 · 복지 등과 관련된 총 29개 부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그 성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행합니다.

또한 현역이 담당하던 총 39개 부대의 시설물 관리, 차량정비, 세탁, 복지시설 등의 업무를 민간인력 또는 민간기업으로 전환합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3 선진 국방정보환경 및 장병 중심의 군수지원체제 구축

분산된 전산실을 통합하여 메가센터를 설치하고, 광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며, 정보체계간 완벽한 상호운용성을 갖추어 국방정보환경을 선진화합니다.

또한 양질의 군수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조달 및 자원관리체제를 혁신합니다.

이를 위해 웹 기반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전군 군수자산 현황을 가시화하고 작전지원 능력을 제고하며,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며 경쟁계약을 확대해 나갑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훈련장 · 사격장 소음, 환경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 구조 개편 및 배치 조정시 국토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민원방지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를 권역화 조정

군 구조 조정 및 재배치를 계기로 군사기지를 조정하고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군사시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국방군사시설 기본법」을 정비, 필요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반영합니다.

2 군용비행장 ·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

비행장 · 사격장의 소음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기준 설정 및 소요예산을 평가하고, 나아가 「소음대책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소요자원 조달 및 관련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이주사업 및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방음고 내부

3 오폐수 처리시설의 조기 확충

2010년까지 군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 처리를 강화하여 군 부대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 오폐수 처리시설 확보 계획 ○

'04년	'05년	'06~'10년	총 소요
2,127개	279개	852개	3,258개
2,747억	468억	1,641억	4,856억

Q&A

Q 「소음대책특별법(가칭)」이란?

A 군비행장 · 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을 줄이고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주민 이주 및 방음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각종 자원조달 및 관련 조치 근거를 제공하여, 소음으로 인한 대민 마찰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듭니다”

군복무 기간을 잃어버린 시간 또는 인생의 정체기로 인식하여, 군 복무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1 장병 가치관 확립

병영생활의 핵심 가치는 '인간 중심의 문화' 정착이라는 인식 아래 먼저 군 간부부터 의식을 전환하고 장병들은 군 생활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인성교육기관 위탁 교육, 의식개혁 교육 및 전문교수에 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간부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장병들의 건전한 가치관 및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합니다.

인간 중심의 병영문화란?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 자율 속에서 부여된 임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상·하 원활한 의사소통과 즐거움이 넘치는 병영문화

2 자기계발 여건 조성

군 복무간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목표가 있는 군 생활을 유도하고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인식부터 바꿉니다.

이를 위해 '08년까지 5만 6천여대의 컴퓨터를 설치·보급하여 전 장병이 인터넷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중 중단 없는 학업이 가능하도록 사이버·방송통신대 강좌도 수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노동부와 연계하여 "군 특수 경력 국가공인" 사업을 추진하며, 병영생활간 개인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문화 체험 및 독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3 군 복무 인센티브 부여

군 복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군 복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이를 위해 전역 전 사회적응 교육을 강화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지역내 고용안정센터를 활용, 전역 후 진로 상담 여건을 보장하고 병 봉급 및 특수군무지역 근무수당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가정 같은 환경 속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군대가 됩니다”

군 생활 중 복무 부적응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병사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하는 사회시설과 비교하여 열악한 병영시설 환경이 신세대 장병들의 군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군 복무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복무 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장병 징병검사 체계를 과학화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자의 군입대를 차단하고 신병교육 훈련과 군 복무 중 발견되는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무 부적합자에 의한 각종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합니다.

이를 위해 장병 인성검사를 위한 임상심리 전문가를 채용하고, 징병검사 전담의사 일부를 민간의사로 대체하며, 첨단 정밀 신체검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징병검사 체계를 과학화합니다.



2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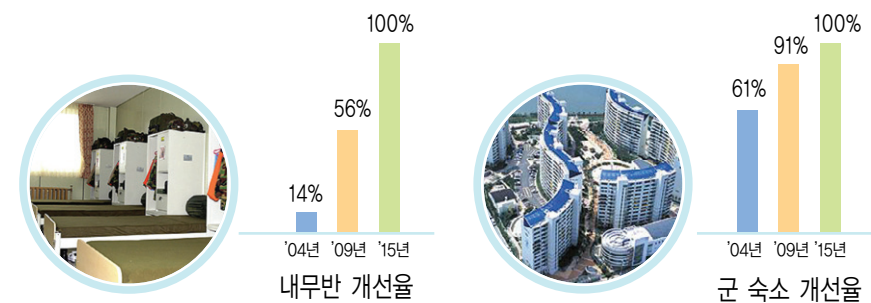
사고예방을 위해 유형별·계절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Vision Camp 등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가에 의한 장병 상담관 제도를 신설하며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조직적인 사고관리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합니다.

Vision Camp란?

소그룹 단위의 심리치료를 통해 왜곡된 인식체계의 전환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시켜 복무적응을 유도하고 자살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군내 자체 심리 교정 과정

3 병영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에 따라 낙후된 병영시설 2천 7백여개소를 현대화하고 침대형 내무생활관을 제공하며 대대단위 복지시설을 대폭 보완하는 등 내 집같이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로 바꿉니다”



우리 군은 아직 군내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며, 권위주의적 사고와 리더십은 상·하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장병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의 원인이 되어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 장병 인권 보장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의 군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으로 탈바꿈 합니다.

이를 위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규정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권담당관 직위를 신설하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인권 보장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장병 기본권 보장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합니다.

군 사법제도는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혁합니다. 즉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2007년부터 중대 범죄에 대해 장병재판 참여제(배심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징계 영창제도도 징계권자 최종 조치 전에 인권담당 법무관이 사전 적법성을 심사하게 하는 등 다양한 장병 기본권 보장 대책을 시행합니다.

2 자율적 생활 보장

병영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발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실천하는 가운데 장병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의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이를 위해 입대 전 병영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입대 100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외출·외박제도를 신병교육 수료 후부터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외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의사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나갑니다.



3 선진형 리더십 개발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지휘통솔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부하를 ‘함께하는 인격체’로 대하는 리더십을 확산시켜 나갑니다.

이를 위해 학교기관의 리더십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부사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며 분대장 지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리더십 교육과 초급간부의 지휘통솔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합니다.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며,
보다 정밀한
첨단 정보과학군**

셋

**국방개혁,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방개혁 추진의 일관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1 「국방개혁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국방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국방개혁기본법」의 내용은 필수사항에 국한하고 안보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개혁기본법」에는 국방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기본방향 그리고 반드시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만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과 기본계획인 「국방개혁 2020」에 포함시키며, 안보환경 변화와 추진 상황 등을 매 3년마다 평가하여 필요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범정부 차원의 국방개혁추진기구 설치·운영

국방개혁이 국민적 공감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부장관과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 추진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동시에 국방부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4 국방개혁을 국방 기본업무로 지속 추진

국방개혁을 일과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방 기본업무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기획·계획·시행·평가·환류를 위한 업무수행 체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Q&A

Q 국방개혁을 법제화 할 경우, 안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A 「국방개혁기본법」에는 국방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 그리고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부분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3년 단위로 안보환경과 국방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필요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안보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요국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사례

- 미국 : 「Goldwater-Nichols Act of 1986」
미 상·하원의원 Goldwater와 Nichols에 의해 추진된 국방개혁 법안으로 “합동성 강화 및 문민 중심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 「국방계획법」
징병제 폐지 및 직업군제 도입, 군사력의 현대화 등을 목표로 한 「'97-'15 국방개혁 장기계획안」을 마련하고 6년 단위의 「국방계획법」을 제정하여 안정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계획법은 우리의 「국방중기계획」을 입법화하는 수준입니다.

과거 한국의 국방개혁 연구 사례

- '88~'90 818연구위원회, 「국방태세 발전방향(818계획)」
- '93~'95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 「21세기 국방태세 연구안」
- '98~'03 국방개혁 추진위원회, 「국방개혁 5개년 계획」
- '99~'03 군사혁신기획단,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

“소요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방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 첨단전력 획득, 부대구조 및 배비 조정, 병력 감축 등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예산의 적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1 국방개혁 소요예산은 약 67조원

개혁을 추진할 '06~'20 기간중 인건비·급식·피복 등 경상적인 부대운영과 전력건설을 위해 전력투자에 소요되는 국방비 총액은 정부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의 합동검토결과 621조원(경상운영비 349조원, 전력투자비 272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추가전력 확보, 부대개편 및 창설 등 개혁 소요는 약 67조원으로 전체의 약 1/10 수준이며 병력절감에 따른 국방인력의 경제활동 전환 등의 효과를 고려시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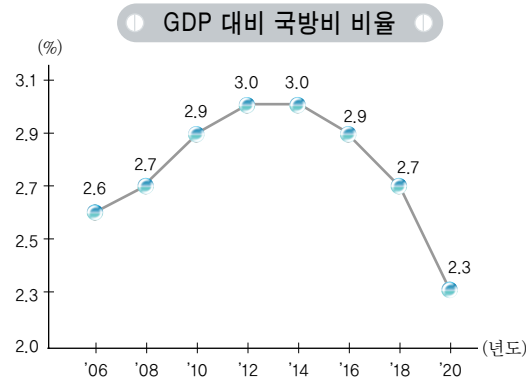
2 차질없이 국방비 확보 가능

개혁기간 중 우리 경제는 평균 7.1% 수준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 디플레이터 2.3%)이 전망되고 정부재정도 경상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방비는 소요가 집중되는 초기단계('06~'10)에 '05년 국방예산 증가율 수준인 9%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책정할 경우 총소요 621조원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비 소요 및 주요 지표 전망

구분	계('06~'20)	'06~'10	'11~'15	'16~'20
국방비 (증가율) (정부재정대비)	621 (6.2) ¹⁾ (16.8)	139 (9.9) (16.7)	216 (7.8) (18.2)	266 (1.0) (15.8)
정부재정 (증가율)	3,701 (7.1)	835 (6.9)	1,185 (7.4)	1,681 (6.9)
GDP (증가율)	22,422 (7.1)	5,085 (7.4)	7,215 (7.2)	10,122 (6.7)

1) 누계기준 증가율 8.0%



국방개혁의 경제적 효과

- 감축되는 약 18만명 이상의 인력이 새로이 민간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아웃소싱 및 민영화, 방위산업 육성, 민간 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 군복무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동시에 군복무로 인한 개인 및 사회의 기회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됩니다.
-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첨단과학기술은 민간으로 파급되어 기술 강국 건설에 기여합니다.

국방비 부담은 타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06년 2.6%에서 2015년 3.0%까지 상승하였다가 대상기간 말인 2020년에는 2.3%로 낮아집니다.
- 이는 분쟁국가 평균 5~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주변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의 국방비

(2003기준)

구분	한국('06기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국방비 규모(억\$)	229	4,049	428	559	652
GDP 대비 국방비	2.6%	3.7%	1.0%	3.9%	4.9%

※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04~'05, 한국은 정부통계

국방개혁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시대적 요구에 뒤처지게 될 뿐 아니라 국방개혁을 위한 적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추후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합니다”



1 북한의 군사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

정부 차원에서는 정치·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및 주변국 관계를 발전시켜 북한의 군사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군은 이를 튼튼히 뒷받침합니다.

2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국방개혁 과정에서 어떠한 군사적 취약성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병력감축은 군의 안정과 높은 사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첨단 무기·장비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하시라도 현존 전력의 즉각적 발휘가 가능하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추진합니다.



3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추진

국방개혁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역할 증대에 따른 제반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연합 지휘관계 발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갑니다.

4 점진적·단계적 추진, 주기적으로 계획을 보완·발전

또한 3년 단위로 안보환경 및 국방개혁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요소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Q&A

Q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의 하에 추진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A 그동안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 당국자간에 국방개혁에 대한 큰 틀과 당위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으며 미측은 이에 공감을 표해 왔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안을 연합사령관과 관계자에게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미측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05년 10월 말 개최된 SCM에서도 의제화됨으로써 양국 국방장관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Q 국방개혁과 전시작전 통제권 환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A 전시작전통제권 환원은 자주 국방의 요체로서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에도 장차 우리 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합참의 능력 강화 및 필수 전력을 보장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원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확보하면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건이 조성된 후에 적절한시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한미 지휘관계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 국방개혁은 21세기 선진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업입니다.
- 국방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국민적 공감대, 군의 자발적 노력이 일치된 바로 지금이 우리 군의 변화와 국방의 혁신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여,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진취적 비전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20」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뒷받침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려는 우리 군의 계획은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조국 수호의 일념으로 위국헌신하신
선배 전우와 호국영령의 깊은 뜻을 계승하여
21세기 선진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뒷받침할
'선진 정예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비 매 품

2005년 11월 7일 인쇄
2005년 11월 10일 발행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편찬 : 국방개혁위원회
발행 : 대한민국 국방부
편집·인쇄 : 대한기획인쇄(02-754-0765)

인터넷주소 : www.mnd.go.kr
문 의 처 : 정책기획관실(기본정책담당관실)
(02) 748-6231~7

